



[실패의 경제]
고용소크·투자 감소에도
“나의 사전에 양보란 없다”
귀족 노조의 마이웨이
03



Economy

코스피	2301.99	(-8.91)	코스닥	825.71	(-2.18)
금리 (연이자율)	2.09	(-0.02)	환율 (원/달러)	1129.20	(+5.70) (16일)

최저임금 후폭풍, 한국경제 '난파선 신세'

부총리마저 “경제에 부담”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총재 회동
연령·업종 등 고용에 영향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재정 통한 개입은 ‘부정적’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김동연 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조찬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후폭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

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했으나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면서도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

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와 회동한 이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글로벌 달러 강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대답했다.

지난 12일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장중 1130원을 넘어섰다.

이 총재는 “지금까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 3개월 원화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원화가 특별히 약세라고 한 것은 6월 중순 이후 단계 나타나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7530원 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우승컵 높이든 프랑스 선수들
프랑스 선수들이 1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크로아티아를 꺾고 정상에 오른 뒤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관 성토장 된 中企간담회

홍중학 중기부 장관
“업계 고충 최대한 반영”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사업·규모별 구분 적용을”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 긴급 간담회에서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여 다시 투자를 늘리고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지만 올해 1분기 결과에서도 나왔듯 근로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소득 수준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홍중학 장관과 박성택 회장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이날 자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후폭풍을 잡

재우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다.

하지만 한쪽에선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쪽에선 역효과를 우려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정책 당국과 기업 현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양새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예정)까지 10년간 최저임금인상률은 연평균 7.2%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과 명목임금상승률(3.3%)을 크게 웃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5%인 50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택 회장은 “법정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최저임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출해야 하는 임금인 만큼 정부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이날 홍중학 장관과 간담회를 하게 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놓고 성토를 하다가 피했다.

한 참석자는 “강한 톤으로 ‘제대로 해 달라’고 현장 목소리를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문제, 카드수

수료 추가 인하, 조달시장 저가입찰 개선,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보증 확대, 외국인력 숙련도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등 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매년 오를 때마다 최저임금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1만원’에 맞춰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중기중앙회도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중기부에 건의했다.

박 회장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회의에 불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영세기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유명무실해 지지 않기 위해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는 장관께서 적극 나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감원, 금융감독혁신 본격실행 취약차주 채무조정요청 가능 전세반환보증 절차 간소화도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힘든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전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혁신 과제의 실행이 본격화된다. 먼저 빠르면 오는 4분기 중으로 은행권에서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진다.

금감원은 은행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할 때 신용대출 원금 감면 대상을 기존 특수채권에서 일반채권으로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금 감면 범위가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특수채권 뿐 아니라 일반채권까지 포함되면 취약계층의 연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주기로 했

다. 대출 약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함에 처한 차주의 신용관리를 위해서는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에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연장한다.

기존 각각 1개월과 2개월이었던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시점을 모두 3개월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5만원 이하 소액연체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시점도 3~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로 반환보증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 상환보증은 전세보증금 중 전세자금대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